광주 광산구, '직접 민주주의' 실험 주목

분쟁 등 지역 현안 토론회·직접투표 실시

대의 민주주의 침해·주민 대표성 논란도

광주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중요 현안을 주민에게 직접 묻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분쟁 등 지역 내 현안이 발생하면 주민이 토론회와 직접 투표를 통해 해법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실상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기득권을 주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것으로, '풀뿌리 자치시대'를 실현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제도 즉,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주민자치 기능 등을 침해하고 주민 직접투표 과정에서도 이권단체 등 특정세력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동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현안은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라는 이름으로, 지역 전체가 고민해야 할 대규모 현안은 '광산人(인) 아고라'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광산구의 절반 면적에 1만2000여명이 사는 스위스 마을 글라루스의 주민총회인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이 마을은 1년에 한번 씩 주민이 광장에 모여 지역현안을 토론하고 직접투표로 해법을 결정하고 있다.

광산구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과거'부터 지속돼온 문제부터 '현재' 진행중인 현안, '미래'에 예상되는 현안까지 때와 장소, 시간을 떠나 지역현안 해결에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광산구는 그 첫 시도로 지난달 18일 첨단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첨단 대상공원 최고의 공원'을 주제로 주민회의를 열었다. 대상공원은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자유토론 등을 통해 주요 안건을 자체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았다. 투표에선 대상공원 주변 모텔 등 상업지역 정화, 상시적 관리 주체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제시됐고, 광산구는 구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또 '광산인 아고라'를 통해 지역내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부지 활용 방안, 인구 7만의 수완동 분동(分洞) 여부, 수완동 공공공지 (公共空地) 활용 등을 묻는 주민 토론회와 주민투표 등을 열고, 주민이 제시한 해법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직접 민주주의 시도에 대해 주민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참가주민의 대표성 여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 2일 열린 수완동 분동 여부를 묻는 주민회의에서는 당시 현장투표로 결정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200여명의 참가자 중 특정 지역(동) 주민이 대다수 참여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로 주민의견을 묻는 게 최상이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광산구의 고민이다.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냐는 일부 시선도 부담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4년마다 한 번의 투표를 통해 민주시민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며, 첫 시도인 만큼 해결하고 고민해야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구속자 석방하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기쉬운 선거법 〈9〉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만 우편 발송 가능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떻게 작성하나

◇**작성방법**=예비후보자는 선거구내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우편 발송을 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종류는 1종에 한한다. 이때 1종의 의미는 그 홍보물의 규격·게재내용·배열방법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편지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단순히 수신인의 성명만을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는 그 게재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없어 1종에 해당한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작성방법은 그 색도나 재질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게재사항**=홍보물의 앞면에는 명칭,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소속 정당명(비당원은 무소속 표기)을, 뒷면에는 작성 근거(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홍보물 발송용 봉투의 뒷면에는 예비후보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법에서 정해진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등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배부방법은 우편발송만 가능하고, 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해 방문객에게 배부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작성방법은**=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한다. 이는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한 면에 그 선거공약 등과 관련이 있는 사진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발송 시기 및 방법은**=홍보물 발송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5월19일)까지다. 이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다.

법정수 이내라면 그 우편발송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2부 또는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다.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 불명, 전출 등 재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 다른 세대주에게 발송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관장 강운태·장휘국 등 18명

3년간 300만원 이상 기부 … 정홍원 총리 1억4400만원 1위

전국 공공기관장 171명 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위례시민연대가 전국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기부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대상자 171명 중 54명(32%)였으며, 시민연대가 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준인 300만원 이상(1년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18명에 그쳤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24명 전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공개를 거부했고, 나머지는 정보가 없거나 기부실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까지 답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한을 넘겼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4명도 답변하지 않았다.

'기부왕'은 3년간 1억4400만원을 기부한 정홍원 국무총리였다. 17개 시·도지사 중 기부금 1위는 염홍철 대전시장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미혼모시설 등에 5695만원을 기부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548만원을 기부했고, 재능기부와 무료봉사 등도 38회나 됐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전남인재육성 재단 등에 840여만원을 기부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총 기부액이 3396만여원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기독교 관련 종교단체에 2850여만원을 기부함에 따라 종교 기부를 제외한 실제 기부액은 542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장만채 교육감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직급보조비를 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2974만원을 기부했고 무료 외부강연도 59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국제봉사기구, 국가보훈처 등 6곳에 80여만원을 기부, 위례시민연대가 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준에는 미달했다. 장관 중에서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25만원을 기부해 가장 액수가 많았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많은 기관장이 기부활동을 사생활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법적 자격에 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파란불

기재부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14일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학소재란 전기·전자, 자동차, 2차 전지, 의약품 등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특수기능을 가진 화학소재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 제품이란 의미로 성능의 차별성이 높은 배합 위주의 화학소재를 가리키며, 정밀화학 소재라고도 한다.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기존 광양만권 석유화학산업이 노후화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다 중동·중국 등 화학소재 후발국들의 시장 추격 및 만성적 대일 무역적자 등의 위기 속에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관련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기능성 화학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범용 및 차별화·고도화 제품 테스트베드 연구기반 구축, 사업화 연구개발(R&D) 등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이 투입돼 광양만권 세풍산단에 시험인증 단지가 조성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 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062)525-5000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직원 모집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남:3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여: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합니다.